

태권도진흥재단 정주여건 미비 인력난

태권도진흥재단이 정주여건 미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에 사무공간을 두고 태권도원 운영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 직원들의 정주여건 부실로 입·퇴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전북도의회 강영수(민주당·전주시 제4선거구) 의원이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주 태권도원이 지난 2014년 4월 개원해 재단이 태권도원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채용인원은 총 30명이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인원은 채용인원보

강영수 도의원 “입주 이후 채용 보다 퇴직 더 많아 정주여건 열악·낮은 보수 수준이 가장 큰 요인”

다 6명이나 많은 36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고용신분이 안정적인 정규직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22명이 채용됐지만, 퇴사인원은 이보다 4명이 많은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단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퇴직 또는 이직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주여건 미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재단 직원들은 태권도원 인근에 전월세를 얻어 거주하거나 심지어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며 불편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직원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동반 이주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가가 설립한 재단으로서 좋은 처우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보수 수준도 낮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권도원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국기원 전체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정주여건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건립방안과 교육인프라 및 문화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오정화 “전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주문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은 전주시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오정화 시의원(우아·2동,인후3동)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에 외형적으로 도서관의 숫자는 많지만 도서관의 역할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화 의원

오 의원은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04년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중간평가나 결과보고도 없이 12년이 흐른 뒤에도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전문사서 인력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시 시립공공도서관 11곳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사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주시 대표도서관인 완산도서관 관장도 사서직으로 임명,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도서관의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민주당 “이정현, 배우자 공짜 전시회 내막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인이 민화전시회를 하면서 민간 회사의 갤러리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른바 ‘공짜 전시회’ 논란과 관련, “문제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남의 허물에는 각종 망언으로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모른다’ 세 글자로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비선실세 스캔들로 나라를 뒤흔들더니 여당대표는 배우자 그림강매 스캔들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신속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순실게이트 편파기소 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혜철 최고위원) 의원 5명이 현 정부 '비선실세'로 의심받는 최순실(현재 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중 하나인 차은택 감독과 가까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의 이정현 대표 배우자 공짜 그림전시회와 강매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시 전시회를 통해 그림 1점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가격으로 팔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배우자 그림전시회 의혹과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 낱알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감독과 가까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이 대표 부인의 민화전시회 당시 회사 소유의 갤러리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맡고 있는 인사다. 창조경제추진단장직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차 감독이 거처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직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박 대표는 우리 애기들을 비롯해 가족들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해 온 그런 사이다.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교류해 온 사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손학규 “민주당 당적 버리고 개헌해 제7공화국 열겠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갈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만 보고, 소절음으로 뚝뚝뚝 나이가 갔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

은 그 명운을 다했다. 지난 30년 동안 조급식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며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향후 활동에 관해선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국회

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버리겠다”고 민주당 탈당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순정 전주시의원 “저출산 고령화 근근 대책 마련을”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순정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출생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국 평균치 1.3명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장려금 정책이 한때 붓물처럼 확산돼 전주시도 출산장려금 정책에 기대 인구 증가를 노렸지만, 저출산 문제 극복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실적 정책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 성과만을 쫓아서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김순정 의원

전북시민단체·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도박중독 문제 가중·서민경제에 해악” 주장

새만금 카지노에 반대하는 전북시민단체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힘을 합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조직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대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20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지역에 강원랜드와 같은 내국인용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지난 8월 17일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 운영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된다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과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내국인 카지노를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부터 개정하려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45명 중 20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비대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을 약속해놓고도,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시민단체대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원주,진안,무주,장수) 동석해 새만금카지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이병호 국정원장 발언 보니 청와대와 정부도 새누리당 색깔론에 가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정말 제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 분노는 폭발 지경인데 새누리당만 과거 10년 전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종북논문에 빠져서 도끼자루 씌는 꼴 모른다. 이유는 딱 하나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궁

리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국정원 국감에서 나온) 국정원장 발언을 보면 거기에 우리 청와대와 정부까지도 가세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며 이병호 국정원장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문 전 대표가 북한과 상의한 것이 맞다고 주장, 사견 논란을 자초한 것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국가시스템은 정부가 수립한 이후 70년 넘는 긴 세월을 통해 하나씩 발전시켜 온 것인데 박근혜정부는 그 모든 시스템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국정운영을 아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면서 정말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내가 먼저 보여드린 바 있다”며 “시스템대로만 따르면 문제없다”고 청와대와 우 수석의 행보를 비판했다. /뉴시스

박병술 ‘전주 호 문화 거리공원 조성’ 제안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마을 남부권역에 ‘전주 호 문화 거리 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박병술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에 2000년부터 수많은 특화거리가 조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둔 곳은 많지 않다”며 “전주의 전통과 호 문화를 집약한 호 문화 거리 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술 의원

박 의원은 “전주시는 2000년부터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의 거리, 청소년 거리, 전주 첫 마중길 등 13곳에 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특화거리를 조성했고 지금도 조성 중이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효자동이라는 명칭과 정수원백서 효자정려, 효자 박경환 효열각, 박진 효자비와 효자 백나중의 효심을 알리기 위해 그의 호에서 이름을 딴 학인당 등 효행을 실천한 선조들의 스토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며 “전주의 중심 한옥마을 옆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역에 호 문화 거리공원을 조성하면 성공적인 도시 재생사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 문화 도시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김윤철 ‘전주푸드와 전통시장 상생방안’ 제안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전주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주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할 것을 제안했다. 김윤철 시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은 20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해 전주푸드와 지역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

김 의원에게 따르면 전주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5년 12월 송천동 1호점을 개장한데 이어 효자동과 종합경기장 내 2, 3호점을 운영, 직매장 3곳의 월평균 매출은 3억원 가량으로 성공적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생활권 가까이에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주푸드 직매장의 성공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전통시장 가까이에 전주푸드 직매장을 열어 시장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허승복 ‘반딧불이 공원 정책 변경 의혹 풀어야’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은 반딧불이 생태공원 정책결정 변경 과정에 대한 전주시의 설명을 요구했다. 허승복 시의원(중앙, 풍남, 노송동)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사업변경은 전북도의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는데 정책 결정 당사자는 누구고, 어떤 이유로 사업변경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변경에 대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특히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최종 결정 권한이 도에 있더라도, 도는 도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단체가 사업 내용을 선정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의회는 전주시와 관련된 사업변경 정책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떤 이유로 변경이 이뤄졌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허승복 의원